

정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국무회의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급식 비리 신고 포상금 확정 가축 방역 안한 사육농가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된다. 다만 입주인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5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입주인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뒀다.

또 아동학대, 급식, 통학차량 등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기준도 정했다.

이밖에 위 안전을 포함해 법률안 1

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운용평가 결과 등 대통령 보고안건도 2건 상정됐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 및 방역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의료기관장이나 학교장 소속 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미실시한 경우 처음에는 100만원, 두 번째는 15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물면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판매자는 처음 위반 시 30만원, 두 번째는 45만원, 세 번째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누리상품권을 일부 주점과 노래방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인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에 대해서만 은누리상품권 기맹 등록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을지태극연습, 평화 위한 방어 훈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처음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한국군 단

독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대비 역량강화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

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훈련 성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정부의 을지태극연습을 ‘도발적인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문 대통령 “기밀 유출 비호 행태에 유감”

강호상 연호 나선 자유한국당 정면 비판

“국가운영 근본문제 만큼 기본 상식 지켜주길 요청 공직자 기밀 유출 있어선 안 될 일... 국민들께 사과 공직자강 바로 세우는 계기 삼아 철저히 점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태를 촉발시킨 강호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호에 나선 한국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의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

그러면서 “당리당리를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밀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정당 여성 기구의 역할과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은?

민중전북도당, 여성 당원 대상 리더십 교육 여성위 소장 강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

29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여성당원들의 역량강화와 대표성 확대, 2020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전주 한성호텔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김은경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비롯해 중앙당 교육운영TF 팀이 강연을 펼쳤다.

50여명의 여성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민주당원의 정체성과 핵심가치, 정강·정책 분석과 이해, 성평등이 민주주의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당, 정당의 여성 지도자와 여성 기구의 역할,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김이재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은 “여성당원들의 권익 증진과 역량을 강화해 21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여성 당원의 힘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다양한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29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열렸다.

‘지방의회 청원하고픈 주민도 의원 소개없이 청원서 제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 채택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9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를 했다.

또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이원택 정무부지사, 정병익 부교육감이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에 청원하고 싶은 주민도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회의에 앞서 전북도의회 김대중 운

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활동에 활발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의회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이어 도립국악원의 환영 공연 관람과 전북예술회관에서 전북브랜드 뮤지컬 ‘홍도’ 관람, 전주 한옥마을 경길전 등을 탐방하며 전북의 역사 및 전통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